

“2022년 금속노조 투쟁은 나의 투쟁”

노동중심 산업전환 총파업 현장순회 3주 차 ... 경주지부 현장순회 강행군, 가장 많은 조합원 만나

‘노동중심 산업 전환 노정교섭 쟁취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금속노조 현장순회단이 3주 차 순회를 이어가고 있다.

노조 현장순회단은 4월 18일 충남 지부 현대제철지회, 현대제철비정규직 지회, 현대모비스



아산지회, 현대산업지회, 현대모비스 아산물류지회 등을 방문해 현장선전전과 간담회 등을 열었다. 순회단은 56차 정기대의원대회 결정 투쟁방침을 환기하고, 현재 정세와 산업전환 상황을 설명한 뒤 20만 총파업 조직을 독려했다.

노조 순회단은 4월 19일 2차 중앙교섭으로 순회를 중단하고, 20일 경주에서 조합원들을 만났다. 순회단은 아침 7시 세진지회에서 활동을 시작해 열한 개 사업장에 방문했다. 순회 도중 경주지부 법률학교 현장에 들러 교육 중인 조합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경주지부 지회장 간담회를 통해 “4월 4일부터 총파업 조직을 위한 현장순회를 3주째 하고 있는데, 4월 20일 경주지부 순회는 정말 뜻깊은 활동이

었다”라며 “오늘 2만 보 넘게 움직였다. 현장순회 중 가장 많은 결음으로 가장 많은 사업장, 가장 많은 조합원 동지를 경주에서 만났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장혁 위원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노조가 투쟁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서 현장에 다녀보면 많이 침체해 있는데, 경주는 살아 있었다. 활기 넘치는 전투적인 분위기를 경주지부 현장에서 느꼈다”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7월에 20만이 함께하는 총파업 투쟁을 한번 해보자고 야심 차게 결정했다”라면서 “경주 동지들에게 총파업을 독려하러 왔다가 오히려 동지들에게 힘을 많이 받았다. 이 기운을 다른 지부에게 전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위원장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2022년 임단투 승리가 20만 금속노조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경주지부 승리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라고 결의했다. 위원장은 현장순회를 조직한 정진홍 경주 지부장과 지회장,

상집 동지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정진홍 노조 경주지부장은 지회장 간담회에서 “저도 지부장 당선되고 첫 현장순회를 했다. 감염 우려 때문에 조합원 동지를 보지 못하고 간부 동지를 중심으로 만났다”라며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힘을 많이 얻었다”라고 인사했다.

정진홍 경주지부장은 “이런 힘의 기반은 여기 계신 지회장 동지들이다. 늘 든든하고 늘 고맙다”라면서 “2022년 금속노조의 투쟁이 나의 투쟁이고, 우리 지회의 투쟁이 경주지부의 투쟁이다”라고 강조했다.

정 지부장은 “저는 금속노조를 사랑하고 아끼는 동지들을 믿고 열심히 투쟁하겠다. 경주지부의 명성과 지부가 걸어온 길을 이어가는 지부장이 되겠다”라고 결의했다.

“노동법 개정·비정규직 철폐 투쟁 조직하자”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결의대회 열어 ... 20일부터 ILO 핵심협약 국내 효력 발생

2021년 2월 26일 국회가 비준하고, 4월 20일 정부가 비준서를 보낸 ILO 핵심협약은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은 핵심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국내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가맹 산별노조연맹 소속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이 4월 20일 국회 앞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노조법 2조 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틀어막는 노조법 2조 등 핵심협약 기준에 미달하는 국내법 개정에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법 개정을 극렬하게 반대하며 ILO핵심협약 무력화를 시도하는 전경련 등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를 통해 “4월 20일부터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과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관한 협약,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 발효한다”라며 “이로써 ILO 핵심협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까지 30년 동안 투쟁했다”라면서 긴 시간이 걸린 이유로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집단의 반대를 들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경총은 4월 18일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란 보고서를 냈다”라면서 “자본가집단이 계속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분명하게 보장하고, 사용자와 자본이 면피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노조법 2조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이 120만 조합원과 함께 개정 투쟁 전면에 나서겠다”라고 결의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우리 노동자는 모든 노동자에게 부여한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고 있다”라며 “2022년에 반드시 노조법 2조 개정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드는 투쟁을 조직

하자”라고 외쳤다. 결의대회 참가 노동자들은 전경련, 국민의 힘 당사,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행진하며 노조법 2조 개정을 위한 결의를 높였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ILO 핵심협약 29호, 87호, 98호, 105호 등 조항 비준을 계속 미루고 있었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데, 국내법이 핵심협약에 미달해 충돌했기 때문이다.

2021년 유럽연합(EU) 등이 노동권 제한이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무역 제재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한국기업의 수출길이 막힐 상황에 부닥치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부랴부랴 ILO 핵심협약 비준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는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 관계법 개정을 막기 위해 있는 힘을 다했다.

“피해자만 왜 악몽 같은 시간 보내야 하나”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인권위 진정접수 ... KEC, 2차 가해자 포함 고충처리위 구성

상급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조합원이 4월 19일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 라고 호소하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켜달라” 라고 촉구했다.

권수정 금속노조 여성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021년 관리자가 밀폐 공간에서 두 명의 여성노동자와 각각 면담하며 직장 내 성희롱했다” 라면서 “그 공간에 CCTV가 없었다. 관리자가 면담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여성 조합원들은 녹취할 생각도 못 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수정 노조 여성위원장은 “두 명의 여성 조합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자 사측은 증거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조사한답시고 캠코더를 들고 현장에 들어와 다른 동료들이 모두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웃은 언제 세탁하냐는 등 왜 묻는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질문을 했다” 라며 KEC 사측의 허술한 조사과정에 분노했다.

사측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피해자들과 노조 구미지부 KEC지회는 사건을 노동부 구미지청에 접수했다. 노동부 구미지청은 피해자가 있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사측의 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2차 가해를 모두 기각하며 사측과 가해자 편을 들었다.

권수정 여성위원장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에 두 가지를 진정한다” 라며 ▲KEC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에 대한 올바른 판단 ▲증거가 없다고 핑계 대며 가해자들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직장 내 성희롱과 2차 가해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노동부 구미지청의 행태를 2차 가해로 지정 등을 촉구했다.

KEC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기자회견에서 “잘못은 저 사람들이 했는데 피해자인 제가 왜 여태까지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너무나 힘들고 억울하다” 라며 “가해자들이 반드시 처벌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호소했다.

피해자는 KEC 사측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부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빠뜨렸다고 “저를 괴롭히고 성희롱한 사람과 가해자 주위 사람들의 증언만 인정했다” 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인권위를 찾아왔다. 이 문제를 바로 잡아 저를 괴롭힌 사람들이 꼭 처벌받게 해달라” 라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장에서 대구지방고용노

동청장에게 KEC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라고 꼬집으며, 인권위원회가 노동부가 하지 않은 면밀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년 구미 KEC에서 일하는 두 명의 여성 노동자가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과 금속노조는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과와 처벌을 요구했다.

KEC는 문제 해결은커녕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아무 전문성 없는 회사 관계자들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희롱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 라며 강제로 사건을 종결했다. 사측이 구성한 고충처리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2차 가해자도 있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조사과정 자체가 문제다” 라고 지적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기본 원칙인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급휴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측 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가해자가 성희롱 피해자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사측은 조치하지 않으며 방관했다.